

현 단계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동향과 전망*

공동/김현균, 임호준**

Kim, Hyeon-Kyun & Yim, Ho-Joon(2006), Últimas tendencias y perspectivas de la liquidación del pasado en España, *Revista Iberoamericana*, 17, pp. 23-45.

Este trabajo tiene por objeto revisar las últimas tendencias de la liquidación del pasado para curar la trauma histórica en España. La transición española se realizó dejando a la sombra importantes parcelas de la memoria que poco a poco buscan salir a la luz. Así que en el sector público últimamente han aparecido varias intenciones de recuperar esos fragmentos de la memoria. Estas iniciativas empujaron que el Gobierno procediera a abrir oficialmente la caja de memoria y investigara algunas medidas necesarias para una reconciliación final. El proyecto de la Ley que duró un año y medio en redacción y al fin vio la luz en pasado julio es la colección de estas medidas. La norma, de 25 artículos, establece por primera vez un mecanismo para la rehabilitación oficial, en nombre de Estado, de todas las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y la represión franquista. Se trata del texto con que el Gobierno intenta evitar los posibles conflictos sociales reduciendo el nivel al mínimo. A pesar de la insatisfacción de ambos lados ideológicos, sin duda alguna es un paso muy importante para construir un futuro de convivencia democrática y pacífica en la sociedad española.

Key Words: Pacto de Olvido/ Ley de la memoria histórica/ liquidación del pasado en España, 망각협정/ 역사기억법/ 스페인 과거청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F-2003-072-AL2001)

** 연구책임자: 김현균(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임호준(한국예술종합학교)

I. 들어가며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적인 의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과거사 청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부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생겨났고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저널리즘적으로만 알려졌던 외국의 사례가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연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처럼 이미 ‘유명한’ 과거사 청산의 경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사 청산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졌다.¹⁾

이 중에서 가장 논쟁적으로 다뤄진 사례는 단연 스페인의 경우였다. 33개월 동안 총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내전과 잔혹했던 36년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했으면서도 프랑코 사망 이후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좌·우파가 “스페인 국민들의 완전한 형제적 공존”과 국가발전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이른바 ‘망각협정(Pacto de Olvido)’을 통해 별다른 청산 절차 없이 넘어간 스페인의 사례는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불만을 가진 이들은 스페인 사례를 인용하며 ‘청산지상주의자’들을 비판했고, 반대로 청산작업을 지지하는 이들은 스페인의 사례가 세계사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며 스페인은 과거사 청산에 실패한 사례로서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²⁾

그간의 연구를 통해 스페인의 사례를 국내에 소개한 당사자로서 스페인의 사례가 정치적 노선과 맞물린 논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의 그간 연구는 과거사 청산과정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스페인 사

1)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를 참조할 것.

2)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15일자 사설 “뉴 라이트,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는가”를 참조할 것.

회의 사정과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의 사례는 스페인 현대사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스페인의 경우가 마치 과거사 청산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반대로 청산과정이 없으면 후에 부작용에 시달리게 마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스페인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와 결부시키기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물론 유용한 참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중차대한 문제의 준거로 삼기에는 현대사의 성격과 전개과정에 있어 스페인과 우리의 경우가 너무나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산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과거사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내전의 문제인 데 반해 우리는 식민시기의 문제가 아닌가.³⁾ 또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종결된 사안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행기에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망각협정으로 이 문제가 유예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과거사 청산에 대한 뜨거운 논란과 함께 해외의 사례를 긴급하게 소환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스페인의 사례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평가를 요구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현재의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다. 스페인의 사례를 보는 상반된 시각에는 단순히 해석의 차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스페인 사회에서 망각협정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서로 엇갈린 시각을 낳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스페인에서 일종의 과거사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내에서 논의만 무성했지 구체적으로

3) 이런 면에서 스페인의 경우를 우리의 6·25 전쟁 청산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반면교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장차 한반도가 통일되어 6·25 전쟁의 책임, 전쟁 중에 자행된 학살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스페인의 경우가 지금보다 더 논쟁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004년 집권 이후 사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의 사회노동당(PSOE) 정부는 프랑코 치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고 프랑코 동상 철거에 착수하는 등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보는 최근 내전 발발 70주년 및 역사기억법안 제출 등과 결부되면서 스페인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최근의 동향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II.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최근 동향

영원히 망각될 것만 같았던 과거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그에 앞서 1990년대에 영화나 문학작품들이 그 동안 금기시 되었던 내전이나 프랑코 체제의 억압을 픽션으로나마 다루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2001년부터 스페인의 대학 연구팀들은 스페인 전역에서 내전 당시의 집단학살지를 조사하고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약 3만 구의 유해가 집단적으로 구덩이들에 방치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류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다룬 TV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졌다. 2002년 2월 TV3에서 방영된 <프랑코 시대에 실종된 아이들 Los niños perdidos del franquismo>, 프랑스에 망명한 공화파 병사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지나가지 못하리라 No pasarán>(2003)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TV 방영물 외에도 개인적인 조사에 토대한 저술들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의 폭로가 공화파의 시각에서 제기된 것이었지만 제2공화정이나 내전 시기에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교회 방화, 성직자 학살, 암살 등 폭력행위를

고발한 것도 일부 있었다.⁴⁾ 이런 부류의 대표적 저술가로는 역사가 피오 모아(Pio Moa)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0여 권의 저서를 통해 프랑코의 봉기는 당시 임박했던 마르크스주의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의 봉기 덕분에 스페인은 동구권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저술은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민간에서 과거 조명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스페인 야당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 일부 자치도시에서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을 철거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서라며 집권 국민당(PP)을 압박하고 나섰다. 프랑코 파에 태생적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적 노선의 국민당으로는 곤혹스러운 일이었으나 이에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한 민간단체는 스페인 정부가 내전 실종자를 조사하도록 유엔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02년 7월 갈리시아의 작은 도시 페롤(Ferrol)에서 광장에 서있던 프랑코의 기마동상이 시의 결정에 의해 박물관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코의 출생지인 페롤에는 그의 동상과 기념조형물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진보적 정당인 좌파연합(IU)은 그 중에서 중앙광장에 놓여있던 것을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전에도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철거된 예는 있었지만 페롤에서의 사건은 상징적인 것이었다. 비록 완전한 철거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이후 스페인의 각 도시에서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들이 철거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스페인 의회는 2002년 11월 프랑코를 자유를 탄압한 통치자로, 그리고 1936년 7월 18일의 사건을 군부쿠데타로 규정하고 피해자 유해 발굴 및 보상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당이 장악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유해

4) Nicolás Salas, *La otra memoria histórica: 500 testimonios gráficos y testimoniales de la represión marxista en España(1931-1939)* 등이다. José Francisco Guijarro(2006), *La persecución religiosa y la Guerra Civil (1936-1939)*. Madrid, La Esfera de Libros.

발굴과 함께 프랑코의 동상이 철거되는 등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되었다. 2003년 12월, 페롤에서는 가장 오래된 프랑코 동상이 철거되었다. 또 2003년 3월, 바스크 주정부는 프랑코 시대에 정치적 이유로 6개월 이상 수감된 사람들에게 최고 9,600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 정부는 과거를 들쭉시는 것은 국론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며 어떤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04년 3월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사회노동당이 승리한 것은 과거사 청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사회노동당을 여유 있게 앞서며 재집권을 장담하던 국민당이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3월 11일 마드리드 아토차역에서 발생한 열차테러사건의 실상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다 들통 나는 바람에 정권교체와 이라크에서의 스페인군 철수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라크에 1,3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던 국민당 정부는 201명의 사망자와 1,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테러사건이 알 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음에도 파병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분리주의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하고자 바스크분리주의자 그룹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를 유력한 배후세력으로 지목했다. 아스나르(José María Aznar) 총리의 정직하지 못한 정치적 처신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집권 국민당에 등을 돌렸고 이로써 사회노동당은 극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야당 시절 과거사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회노동당이 집권하자 과거사 청산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며 본격적인 ‘기억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진보적 성향의 사파테로 총리는 자신이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ález) 전 총리의 후계자가 아니라 제2공화정의 후계자라고 선언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곤살레스 정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04년 5월, 프랑코재단에 제공해오던 연간 15만 유로의 지원금을 폐지한 것이 가시적인 첫 조치였다. 그해 9월에는 ‘프랑코 정권과 내전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범정부위원회(Comisión Interministerial para el Estudio de las

Victimas de la Guerra Civil y del Franquismo)’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회에 제출할 ‘역사기억법안(Ley de la memoria histórica)’을 입안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사회노동당은 좌파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 프랑코 체제의 동상과 기념조형물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역사적·예술적 유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모호함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 법안의 통과로 스페인 전역에 존재하는 프랑코의 동상들 중에서 규모나 위치 면에서 가장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수도 마드리드의 정부 신청사(Nuevos Ministerios) 앞 광장에 있는 프랑코의 기마동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 동상의 철거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2002년 당시 국민당 소속의 루이스 가야르돈(Alberto Ruiz-Gallardón) 시장은 “역사는 역사로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상의 철거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마드리드 의회는 동상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청부청사 앞 동상의 철거 권한이 법적으로 시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루이스 가야르돈 시장도 더 이상 철거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하여 2005년 3월 드디어 정부신청사 앞에 있던 프랑코의 기마동상이 철거되었다. 정부는 시민들 대다수가 유쾌해하지 않는 인물의 동상을 도심 한 복판에 세워둘 이유가 없으므로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한 것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재빨리 정보를 입수한 소수의 극우파들이 철거현장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철거작업은 특별한 사고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루이스 가야르돈 시장은 중앙정부가 동상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동상철거에 대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회피하면서 “동상은 독재자가 살아있는 동안 철거하는 것이 옳았으며 40년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라는 펠리페 곤살레스의 말을 인용했다.⁵⁾ 마드리드의 동상 철거에 이어 그 동안 극우파 세력의 순례지였던 과달라하라 시에

5) “El gobierno retira la estatua de Franco en Nuevos Ministerios”, *El Mundo*, 2005.3.17.

소재한 프랑코와 프리모 데 리베라(Antonio Primo de Rivera) 동상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사라고사 종합군사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프랑코의 기마동상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사회노동당 정부가 상황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과거사 청산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집권 사회노동당은 야당으로서 국민당 정부를 압박하던 때와 달리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는 작업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스페인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주의 문제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제2공화정은 바스크, 카탈루냐 등 지역 정부에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스페인을 자랑스러운 국가 통합체로 여기는 보수파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다. 결국 스페인 내전은 지역주의와 통합주의의 대결 양상을 띠기도 했다. 내전 기간 동안 프랑코는 바스크 지방을 잔혹하게 유린하였고 카탈루냐 주지사를 총살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는 지역 고유의 언어 및 문화의 말살을 획책하는 등 지역주의를 혹독하게 탄압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재의 과거사 청산 국면에서 카탈루냐, 바스크 등 지역분리주의가 강한 지역의 정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카탈루냐 주정부가 ‘카탈루냐 헌법’의 통과와 함께 프랑코 체제의 단죄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⁶⁾ 2005년 가을부터 불거진, 카탈루냐 신헌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1932년 카탈루냐 주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은 좌·우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좌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사 청산 주장은 단순히 내전을 기억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국면으로 보아 제2공화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회노동당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매우 조심스

6) 1979년의 주 헌법을 대체하는 카탈루냐 새 헌법은 2006년 6월 18일 카탈루냐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었다. 새 주 헌법은 스페인을 “자치 단위들의 국가(el estado de las Autonomías)”로 규정한 1978년의 스페인 헌법의 표현 대신에 “국가들의 연방(una confederación de Estados)”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페인의 국가 형태를 연방제로 규정하였다.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카탈루냐가 하나의 국가(nación)라는 표현도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말 좌파연합(IU)은 2006년을 ‘기억의 해(Año de la Memoria)’로 명명하는 법안을 사회노동당과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회노동당은 시간을 지체했고 2006년 4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물론 국민당은 이 법안에 반대했는데, “헌법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공식적 진실’을 강요하려는 시도이자 민주적이었던 이행을 재조사하는 것이며, 스페인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⁷⁾ 결국 2006년 6월, 스페인 의회는 1931년 수립된 제2공화정 75주년을 맞아 2006년을 ‘기억의 해’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핵심은 ‘역사기억법안’을 입안하여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사회노동당이 2004년 집권하자마자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역사기억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노동당은 좌파 정당들과 합의한 법안의 제출 기한을 세 번씩이나 파기하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만큼 민감한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려웠던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사회노동당이 법안을 내놓지 못하자 좌파 정당들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2006년 7월, 신헌법의 발효를 목전에 둔 카탈루냐 주정부(Generalitat)는 내전과 프랑코 시대를 재조사하는 한편 프랑코 정권에서 내려진 일체의 사법적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내전 당시 카탈루냐 주지사 유이스 캄파니스(Lluís Companys)는 반란군에 의해 총살된 바 있었다. 주정부의 대변인은 “민주적 자유를 수호하다 박해 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⁸⁾

7월에 접어들어 정부가 제출할 법안에서 프랑코 시대에 이루어진 일체의 즉결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삭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파 정당들은 미리 반발하기 시작했다. 곧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였던 사회노동당 정부는 제출을 7월 말로 연기했다. 7월 18일 내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불거질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였다.

7) “Todos los partidos salvo el PP aprueban declarar 2006 Año de la memoria histórica”, *El País*, 2006.4.27.

8) “Primera condena institucional de la Generalitat al franquismo”, *La Vanguardia*, 2006.7.19.

Ⅲ. ‘역사기억법안’의 내용과 성격

2006년 7월 28일, 드디어 역사기억법안이 사회노동당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좌파 정당들과 약속한 기한을 세 번씩이나 어겨가며 1년 6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발표한 이 법안은 25개의 조항과 3개의 부가조항, 그리고 3개의 종결조항(finales)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론은 법안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안의 내용은 빈약하고 제목만 길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내전과 독재시기에 폭력과 박해를 당한 이들의 권리를 인정·증진하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Proyecto de ley por la que se reconocen y amplian derechos y se establecen medidas en favor de quienes padecieron persecución o violencia durante la Guerra Civil y la dictadura)’이었다. 그 동안 좌파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내전과 프랑코 체제의 희생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칭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를 요구했었다.

법안은 우선 그 취지에서 “화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이행기의 정신”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언인데, 좌파 일각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과정 없이 집단적 망각을 도모한 민주화 이행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기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그렇게 과거를 봉합한 것이 당시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적 판단을 담고 있다. 또한 화해(reconciliación), 화합(concordia), 연대(solidaridad), 단결(cohesión) 등의 용어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경계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집단적 기억”을 다시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역사적 기억을 착근시키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페르난데스 데 라 베가(María Teresa Fernández de la Vega) 부총리는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희생자 가족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내전과 프랑코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역사가들이 쓰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⁹⁾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조항은 제2조와 제7조다. 이 조항들은 내전과 프랑코 통치기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로 고통당한 양측 희생자들에 대한 포괄적 복권(復權)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줄곧 논란이 되었던, 프랑코 정권에 의한 즉결심판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부총리는 ‘1978년 헌법 발효로 법적 효력이 만료된 과거의 판결을 이제 와서 일괄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들어 설명했다. 대신, 의회의 결정에 따라 5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청원된 사례들을 조사하여 3인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사례를 희생자로 판정하고 희생자의 이름을 정부의 관보인 BOE(Boletín Oficial del Estado)에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BOE에 기록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법적인 효력을 지니거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은 1년 이내에 청원하여야 하며 청원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심의 과정은 2년 내에 끝나도록 결정되었다. 희생자판정위원회의 위원 5인을 의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게 한 것은 위원 선출에 야당인 국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수파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줬다.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보상 및 연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내전과 프랑코 통치기에 전장(戰場)에서 사망했거나 총살당한 부모를 가진 고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월 132유로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1979년의 보상법을 확대 적용하여 기준미달로 제외되었던 700명가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공화파 포로들 중에서 형량의 감면을 위해 공공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징역형을 산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하여 1,500명가량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비용으로 2천만 유로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이슈는 집단매장지를 발굴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민간에 의해

9) “Un consejo elegido por el Congreso rehabilitará a las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y el franquismo”, *El País*, 2006.7.28.

진행된 발굴 작업을 통해 500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전 실종자는 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법안은 유해 발굴 작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작업을 지원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친·인척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지역의 관할관청이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행정적인 이유로 발굴 작업을 반대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아가 발굴 절차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관할관청이 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안 제17조는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내전과 프랑코 집권기에 세워진 모든 정치적 조형물 중에서 공화파와 국민과 중 한쪽 진영만을 기념하는 것은 공공 장소에서 철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예술적, 건축학적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법 적용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해 보인다. 이 조항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하면 공화파를 기념하고 있는 동상들—예를 들어, 마드리드에 소재한 라르고 카바예로(Francisco Largo Caballero)의 동상—도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내전 기념조형물인 ‘전몰자의 계곡(Valle de los caídos)’에 대해서는 법안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다. ‘전몰자의 계곡’은 내전에서 희생된 양측 사망자들을 모두 추도하는 순수한 묘지의 성격만을 가지며 경내에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해마다 해 왔던 것처럼 프랑코의 기일에 성당구역 내에서 추도미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정치적 행위—예컨대, 팔을 치켜들고 파시스트 찬가를 부르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또한 법안 제22조는 ‘역사기억자료센터(Centro Documental de la Memoria Histórica)’를 살라망카에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내전, 독재, 망명, 제2차대전 당시 스페인인들의 개입, 민주화 이행기의 역사적 자료들을 발굴·수집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법안은 부가조항을 통해 민주화 이행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기억될 수 있도록 했는데, 1968년 1월 1일부터 사면법이 발효된 1977년 10월 6일 사이에 “자유와 민주적 권리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사람들의 직계가족에게 일괄적으로 13만5천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희생자는 4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상금을 포함하여 희생자 보상과 연금 지급에 모두 6천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노동당에 의해 이 법안이 발표되자 집권당을 제외한 좌·우파 정당들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안의 입안 단계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우파들은 발표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당 당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는 이 법안에 대해 “분란이 없는 곳에 분란을 조장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을 제정한 1978년의 합의는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이었고 당시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존중되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금 역사적 기억에 매달리며 긴장을 조성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커다란 실수이며 스페인 국민들 대다수는 역사의 재조사나 공화정과 프랑코에 대해 재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¹⁰⁾ 프랑코 재단의 부이사장인 펠릭스 모랄레스(Félix Morales)는 그간 프랑코의 기일에 맞춰 ‘전몰자의 계곡’에서 열어왔던 추모행사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내전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치적 색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카탈루냐 국민당 대표인 조셉 피케(Josep Piqué)는 사회노동당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회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력인 좌파연합과 제휴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회노동당으로서도 동요될 만한 법안을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¹¹⁾ 또 가브리엘 엘로리아가(Gabriel Elorriaga) 국민당 대변인은 역사기억법안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의 관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인위적 논쟁(polémica

10) “Un proyecto de ley que no satisface a nadie”. *El Mundo*. 2006.7.28.

11) *Ibid.*

artificial)”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며 의결과정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당은 이 법안이 내전 희생자는 기억하면서 ETA에 의한 희생자는 망각하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과거를 들추시기보다 오늘날의 파시즘·전체주의에나 신경 쓸 것을 집권당에 주문했다.¹²⁾ 민주화 이행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철저히 당파적 입장에서 프랑코주의를 재구성해 국민당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역사기억법안에 대한 우파의 일반적 견해다.

이러한 형식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파로서는 법안의 내용에 상당히 안도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보수성향의 일간지 『아베세(ABC)』는 법안이 발표된 다음날 아침 사설에서 “법안이 예고되었을 때보다 파괴적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어제 발표된 텍스트는 여전히 1978년의 헌법적 합의의 기초를 흔들 목적으로 정치적 수순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다”라고 주장했다.¹³⁾ 우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민주화 이행기에 있었던 정치적 소요에 의한 사망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주의의 희생자’로 인정한 것이었는데,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정작 법안의 내용에 실망한 쪽은 좌파 정당들이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동안 좌파들이 내세웠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파의 입장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법안이 프랑코 정권을 유일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은 프랑코가 일으킨 전쟁과 그 이후에 세워진 독재정권에 의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양 진영의 희생자들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론에서도 그 동안 좌파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거셌던 즉결심판의 경우, 좌파들은 독재기간 중에 행해진 모든 즉결심판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적 판결을

12) http://www.libertaddigital.com:83/php3/noticia.php3?fecha_edi_on=2006-07-30&num_edi_on=1454&cpn=1276284612&seccion=ESP_D

13) “Maquillaje para una ley innecesaria”, *ABC*, 2006.7.29.

14) *Ibid.*

변복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노동당 정부는 무효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해 발굴 작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부문으로 넘겨버린 것도 좌파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좌파들은 그 동안 정부에 유해 발굴과 정중한 장례식을 요구해 왔었다. ‘기억 회복을 위한 모임(Asociación para la Recuperación de la Memoria)’의 대변인 에밀리오 실바(Emilio Silva)는 내전에서 총살당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단체가 떠맡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¹⁵⁾ ‘전몰자의 계곡’에 대해서도 좌파정당들의 구상은 그곳에서 프랑코와 프리모 데 리베라의 무덤을 없애고 프랑코의 억압을 기억하는 장소로 꾸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추모 시설을 건설하다 희생된 공화파 포로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안은 ‘전몰자의 계곡’에서 프랑코 추종자들의 집회를 금지했을 뿐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보상 부분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독재기간 중 프랑코파가 압수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파연합 사무총장인 가스파르 야마사레스(Gaspar Llamazares)는 이 법안이 우파와의 대립을 피할 목적으로 ‘카페인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공화파나 좌파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좌파연합은 이 법안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의결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주의적 성향의 카탈루냐 지역 정당 ERC(Esquerra Republicana de Catalunya)의 조안 타르다(Joan Tardà)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코믹한 오페라, 사극, 냉소주의적 행위로서 결사반대한다”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실망했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갈리시아 지역 정당 BNG(Bloque Nacionalista Galego)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Francisco Rodríguez) 대변인은 이 법안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고 결국 즉결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인 ‘기억포럼(Foro de la

15) “Un proyecto de ley que no satisface a nadie”, *El Mundo*, 2006.7.28.

Memoria)'은 이 법안은 “카페인 제거” 것으로서 극히 실망스러우며 정부는 과시즘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대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고 말했다.¹⁶⁾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안은 좀 ‘싱겁게’ 되어 버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과거사 청산 과정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위로와 보상 등 세 가지 영역 모두에 주안점이 주어졌던 반면, 스페인의 과거사 법안은 대체로 절충적 성격이 강하고 희생자 보상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기념조형물 철거, ‘전몰자의 계곡’에서의 정치집회 금지 따위의 조항은 모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결국 역사기억법은 철저하게 화합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시각

프랑코는 1975년 사망 직후만 해도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지층을 잃어왔다. 골수 지지층은 사망하거나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데 반해 그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60년대 초고속 성장으로 ‘스페인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공로보다는 독재자로서 이미지화 되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당 지지자들 중에도 프랑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화된 과거사 청산의 움직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 2005년 11월, 『엘 문도(El Mund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1.2%가 프랑코의 이미지에 대해 ‘나쁘다’ 또는 ‘매우 나쁘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13%나 하락한 것이었다.¹⁷⁾

과거사 청산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태도는 모호하다.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를 위로하자는 대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동상

16) Ibid.

17) “La opinión sobre Franco empeora 13 puntos en los últimos cinco años”, *El Mundo*, 2005.11.19.

철거 등 실천적 국면에 들어서면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듯하다. 2005년 스페인 사회연구센터(CIS)의 조사에 의하면, 54.1%의 국민들이 내전 희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찬성한 반면 반대한 사람은 24.8%였다. 또 53.3%가 지금이 이러한 불의(不義)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답한 반면 43.3%의 국민들은 이미 역사가 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답했다.¹⁸⁾ 조사 결과는 과거사 청산 작업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사회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던 역사기억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엘 문도』의 조사에 의하면, 41.3%의 국민들이 사회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이 화합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5%만이 이 방법이 과거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응답했다. 또 33.2%의 국민들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프랑코 동상의 철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마드리드에서 동상이 철거될 무렵인 2005년 3월,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엘 문도』의 조사에서 ‘프랑코 정권의 모든 기념조형물을 철거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6%가 찬성을, 54%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¹⁹⁾

2005년 11월은 프랑코 사망 30주기를 맞아 스페인 사회에서 프랑코와 관련된 논의들이 붓물처럼 쏟아지던 때였다. 당연히 사회노동당이 준비하고 있던 역사기억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사파테로 총리가 중요한 국가 의제들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던 차에 역사기억법에 대한 좌파정당의 요구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자 스페인 국민들은 법안이 가져올 수 있을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던 것 같다. ‘전몰자의 계곡’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곳의 대형 십자가를 철거한다거나 프랑코의 유해를 제거하려 한다는 등등의 소문이 돌았으나 국민들 대다수는 그대로 남겨두는 쪽을 원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정부가 법안의 발표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처음 예상과 달

18) “En busca de la memoria histórica”. *El Mundo*, 2005.11.18.

19) <http://www.elmundo.es/elmundo/debate/2005/03/544/prevotaciones544.html>

리 결정될 법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민심의 동향도 살펴야 했던 사회노동당 정부는 시간을 끌면서 법안에 사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사회노동당이 국민당 정부의 오판과 실수 덕분에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을 때와 달리 집권 후 여러 사안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게 되자 역사기억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희석되게 되었다.²⁰⁾

2006년 7월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던 때였다. 언론들이 앞 다투어 내전 관련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과거의 문제가 다시 조명되었다. 발표가 임박한 법안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거의 다 알려진 상황이었다. 신문매체들은 정부가 즉결심판을 무효화하는 문제를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엘 파이스(El País)』가 스페인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4.5%의 국민들이 내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복권하는 것에 찬성했고 25.6%의 국민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회노동당 정부가 준비 중이던 역사기억법에 대해서는 54.9%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7.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1년 전에 비해 훨씬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랑코 정권의 기념조형물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40.9%의 국민들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3.1%의 국민들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²¹⁾

결국 7월 28일에 발표된 법안은 양측 모두를 고려한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인다. 기념조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안 없이도 철거를 강행해 온 터에 이

20) 현재 사회노동당 정부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평가는 호의적이다. 2006년 4월 CIS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우 잘하고 있다' 5.0%, '잘하고 있다' 31.2%, '보통이다' 40.5%, '잘 못하고 있다' 14.2%, '매우 못하고 있다' 6.8%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지율 조사에서 38.6%를 기록한 사회노동당은 25.3%를 기록한 국민당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40_2659/2640/e264000.html

21) "El 64% de los españoles quiere que se investigue la Guerra Civil y se rehabilite a las víctimas". *El País*, 2006.7.18.

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기념조형물 철거 조항마저 없으면 법안은 희생자 보상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법안이 발표된 직후, 좌·우파 정당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각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법안을 무난하게 평가했다. 일례로, 영국의 저명한 스페인 역사 전문가 폴 프레스톤(Paul Preston)은 “법안에 대해 스페인 사회 일각에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법안은 스페인 역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전몰자의 계곡’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이 법안을 만들었다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프랑코의 동상을 철거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²²⁾

V. 향후 전망

역사기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350석의 하원 의석 중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164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노동당으로서는 좌파 정당들뿐만 아니라 148석의 제1야당인 국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사 청산 작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일정 부분 정부를 망설이게 했을 것이다.

좌·우파가 법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결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덕분에 법안의 의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당도 어떤 식으로든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안

22) “El historiador Paul Preston se muestra en contra de la retirada de los símbolos franquistas”, *El País*, 2006.8.2.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법안 발표 직후 국민당의 대변인도 국민당이 이미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면 “합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동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²³⁾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대적인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정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의회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당의 요구에 따라 그나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쳤던 프랑코 기념조형물 철거 조항마저 삭제되는 등 더욱 ‘싱거운’ 수준이 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커다란 동요 없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페인 국민들 중에서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 명단과 죄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그런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스페인 국민들은 내전을 불러온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엘 파이스』의 지난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전을 가져왔던 ‘두 개의 스페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현재에도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5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3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²⁴⁾

사실, 스페인 밖에서 보기에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스페인 사회의 매우 뜨거운 이슈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재의 스페인 국민들은 정치적 이슈에 크게 관심이 없다. 2006년 스페인 사회연구센터(CIS)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에 대해 동료들과 전혀 또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70%를 넘어섰다.²⁵⁾ 물론, 내전 발발 7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코와 그의 시대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노동당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당수의 스페인 국민들이 여전히 역사적 비극에 대한 기억과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상처가 아물기 위해

23) “El gobierno tiende la mano al PP para ‘cerrar con honor para todos’ la página de la Guerra”, *ABC*. 2006.7.29.

24) “El 64% de los españoles quiere que se investigue la Guerra Civil y se rehabilite a las víctimas”, *El País*. 2006.7.18.

25) 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40_2659/2642/e264200html

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기억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앞으로 스페인 사회가 과거사라는 ‘판도라의 상자’ 때문에 또다시 사회적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폴 프레스톤 역시 스페인에서 현재와 같은 과거사 청산 열기가 10년 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²⁶⁾

과거사 청산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거의 비극적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사 청산에 나섰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에서 이상적인 과거 청산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것은 철저한 과거 조사와 함께 학살과 가혹행위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법정에서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통해 상처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비추어 보자면 최근 스페인에서 진행된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타 사례들과 비교해 실질적 청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사파테로 정부의 전략적 고려 외에도 민주화 이행기를 거쳐 유럽사회의 정치·경제적 후진국에서 눈부신 도약을 성취해온 스페인 현대사의 전개가 내전의 트라우마를 회색시키고 상대적으로 과거청산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해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²⁷⁾ 이제 스페인의 어두운 과거사는 적당한 환멸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화·역사의 현재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기억과 성찰의 장(場)을 기다리고 있다.

26) “El historiador Paul Preston se muestra en contra de la retirada de los símbolos franquistas”, *El País*, 2006.8.2.

27) 사회연구센터(CIS)의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민주화 정도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580_2599/2588/e258800.html) 또 같은 기관의 2006년 조사에서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봉착해 군사정부가 민주정부를 대체할 경우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10.1%인 반면, ‘어떤 경우에도 지지할 수 없다’는 응답이 75.4%였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스페인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성숙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20_2639/2620/e262000.html)

참고문헌

- 안병직 외(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 황보영조(2006), “재조명되는 역사의 상처”, 『주간조선』 2006.4.6.
- “뉴 라이트,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는가”, 『한겨레신문』 2006.2.15.
- Aguliar Fernández, Paloma(1996), *Memoria y olvido de la Guerra Civil española*, Madrid, Alianza.
- Bennassar, Bartolomé(2005), *El infierno fuimos nosotros, La Guerra Civil Española(1936-1942)*, Madrid, Taurus.
- Moa, Pío(2003), *Los mitos de la Guerra Civil*, Madrid, Esfera de los libros.
- Moradiellos, Enrique(2004), *1936. Los mitos de la Guerra Civil*, Madrid, Península.
- Silva, Emilio y Santiago Macías(2003), *Las fosas de Franco. Los republicanos que el dictador dejó en las cunetas*, Madrid, Temas de Hoy.
- Torres, Rafael(2002), *Desaparecidos de la Guerra de España (1936-?)*, Madrid, Esfera de los Libros.
- “El 64% de los españoles quiere que se investigue la Guerra Civil y se rehabilite a las víctimas”, *El País*, 2006.7.18.
- “El gobierno retira la estatua de Franco en Nuevos Ministerios”, *El Mundo*, 2005.3.17.
- “El gobierno tiende la mano al PP para ‘cerrar con honor para todos’ la página de la Guerra”, *ABC*, 2006.7.29.
- “El historiador Paul Preston se muestra en contra de la retirada de los símbolos franquistas”, *El País*, 2006.8.2.
- “En busca de la memoria histórica”, *El Mundo*, 2005.11.18.
- “La opinión sobre Franco empeora 13 puntos en los últimos cinco años”, *El Mundo*, 2005.11.19.
- “Maquillaje para una ley innecesaria”, *ABC*, 2006.7.29.
- “Primera condena institucional de la Generalitat al franquismo”, *La Vanguardia*, 2006.7.19.
- “Todos los partidos salvo el PP aprueban declarar 2006 Año de la memoria histórica”, *El País*, 2006.4.27.
- “Un consejo elegido por el Congreso rehabilitará a las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y el franquismo”, *El País*, 2006.7.28.

“Un proyecto de ley que no satisface a nadie”, *El Mundo*, 2006.7.28.

http://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580_2599/2588/e258800.html

http://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20_2639/2620/e262000.html

http://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40_2659/2640/e264000.html

http://www.cis.es/cis/opencms/-Archivos/Marginales/2640_2659/2642/e264200.html

<http://www.elmundo.es/elmundo/debate/2005/03/544/prevotaciones544.html>

http://www.libertaddigital.com:83/php3/noticia.php3?fecha_edi_on=2006-07-30&num_edi_on=1454&cpn=1276284612&seccion=ESP_D

김현균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은천아파트 205동 902호

pedrokim@smu.ac.kr

임호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71-3 502호

hojoon33@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11일